

# 청년 1인 가구의 서비스 미이용에 대한 인식 유형화

- Q방법론을 활용하여1) -

오혜인<sup>1</sup>, 문영민<sup>2</sup> 박민선<sup>3</sup> [홀로그래프]

[<sup>1</sup>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sup>2</sup>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sup>3</sup>사단법인 오픈도어 대표]

## 1. 서론

“왜 혼자 사니?”라는 질문에 “혼자가 좋아!”라고 답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십팔 독립선언』(강세영, 2019)에 나오는 1인 가구 청년들의 목소리는 청년 1인 가구의 홀로서기가 단순히 가족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삶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완성해가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선택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2025년의 대한민국 청년들의 ‘홀로서기’는 결코 녹록치 않다. 급변하는 기술, 정치, 사회적 격변 하에서 천금같이 지켜지던 전통적인 성공 서사는 매일같이 해체되고 있고, 청년들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거대한 존재론적 불안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생애주기상 직업·소득·관계망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에 놓여 있으며, 주거 불안, 건강관리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차원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변화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다. 비혼 및 만혼의 증가와 가족해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등으로 인해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23)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은 약 36% 정도이며, 청년으로 구성된 가구(만 19~34세) 중에서는 약 57%가 혼자 사는 청년인 것으로 보고된다. 청년 1인 가구의 규모는 2000년 78만 명 수준에서 20년 만에 193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2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청년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맞물려 청년 정책 전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 사회적 도시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를 시작으로 2019년 「서울시 1인 가구 종합 지원계획」이 발표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행정적 대응 체계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통해 당시 급증하던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고자 공공부문 인턴제, 취업 알선 등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책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2020년에는 「청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청년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는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어 202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의 시행을 통해 청년기본법과 연계하여 고용 문제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진로 설계, 역량 개발, 고용 서비스 개선 등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1인 가구 지원제도와 청년정책의 발전 과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분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실무 차원에서 ‘청년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서비스가 설계 및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1인 가구 지원정책과 청년정책이 서로 중첩되며 형성된 교집합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사업 간 중복과 경계의 모호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자체들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의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제공하고 있다. 주거 및 안전 영역(예: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등), 건강 및 생활 영역(예: 병원 동행 서비스,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영역(예: 청년 참여형 1인 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 등에서 유사한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조건과 복합적인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주거·안전·건강·사회적 관계 등 실질적 삶의 영역 전반에 걸친 다차원적 정책 대응이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 법 제정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청년 1인 가구의 구조적 어려움 완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근거는

1) 본 논문은 숲과나눔 풀씨연구회의 지원을 받아 연구가 진행되어 사회복지연구 2025, vol.56, no.3, pp.183-215(33page)에 게재되었으며, 결과보고서에 게재문을 그대로 실었음을 명시합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전국 지자체의 20% 정도는 아직도 1인 가구를 위한 독자적 서비스나 정책이 부재하며, 일부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복지 서비스들을 단순히 1인 가구 서비스로 포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한겨레, 2023). 운영자 입장에서는 홍보 채널의 제한성, 이동이 잦은 1인 가구만의 특성 등으로 인해 대상자 파악이나 모집이 어렵고, 상위 정책 목표(실적, 예산 소진 등)에 맞춰 서비스가 기획되다 보니, 실제 1인 가구의 수요와 정책 목표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나타난다(송혜림 외, 2019).

더 나아가, 청년들은 정보 접근성의 한계, 복잡한 행정절차, 개인정보 노출 우려, 사적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강한 욕구, 사회적 고립, 금전·시간 부족, 제도적 개입에 대한 경계심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보고되어 왔다(김성아, 2023; 양준영, 2022; 안현찬, 2022; 채병주·황선재, 2021). 이는 ‘정책 서비스 외면 현상’으로 불리며, 정책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일부 연구는 이러한 미이용 현상의 근본 원인을 청년 1인 가구 내부의 이질성에서 찾고 있다. 먼저, 채병주와 황선재(2021)는 동일한 소득·교육 수준이라도 주관지위와 미래지위의 차이가 복지영역 선호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예컨대, 모든 지위가 낮은 소외형보다, 더 나은 주거지로의 이동욕구가 큰 성취형·불안형의 그룹이 주거복지정책 선호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임주원과 김서현(2023)은 온·오프라인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력이 같지 않고 각각의 특성이 독립적이라는 점, 그리고 온·오프라인 사회적 관계망의 수준이 높은 유형이 반드시 1인가구 청년의 삶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점을 규명해, 전통적인 관계망에 대한 공식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에 여전히 잔존하는 1인 가구에 대한 편견 또한 서비스 미이용의 배경이 된다(정순희·임은정, 2014). ‘정상적인 청년의 삶’을 안정된 직장, 결혼, 가족 부양 등으로 한정하는 사회적 이미지와 이에 대한 불만은 청년들로 하여금 제도 밖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독립전략을 택하게 하는데, 역설적으로 이는 더 깊은 고립과 구조적 어려움을 낳는다. 결국, 서비스 미이용과 정책 기피 현상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층의 사회적 안전망 이탈과 불평등 심화를 심각하게 가속화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 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상자 범주화나 획일적 지원을 넘어, 다차원적 취약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집단의 주관적 인식과 생활 맥락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질적 집단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 틀과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청년 1인 가구가 정책 서비스를 외면하는 현상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탐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들은 왜 정부의 지원을 외면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 2. 본론

### 1) 이론적 배경

#### (1) 청년 1인 가구 대상 서비스와 미이용 실태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혼자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8년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면서 1인 가구도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1인 가구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에 따라 주거, 사회관계망, 안전, 건강, 일상생활 돌봄 관련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2023년에는 대통령직속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가 출범되어 ‘청년 1인 가구’만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안정적 경제기반, 사회적 관계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등 4개 분야별 정책이 마련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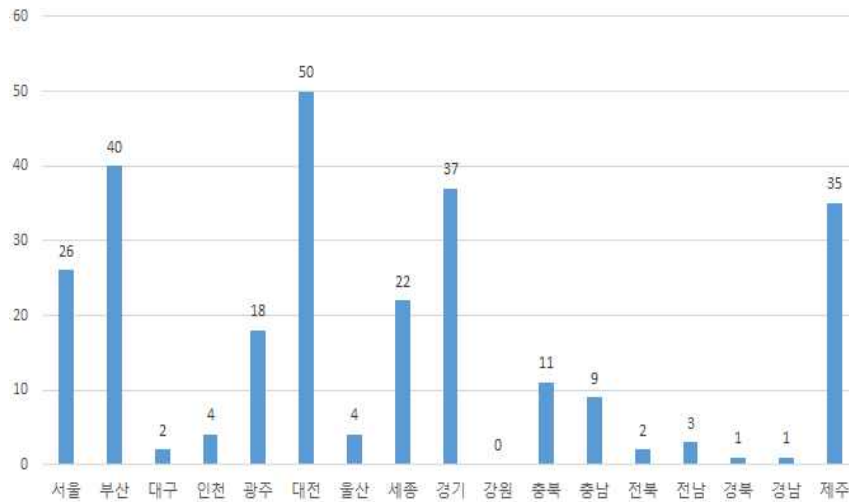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실질적 지원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인 가구 실태조사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이후로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1인 가구 지원이 확대되어 2024년 2월 기준 1인 가구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전국 시군구 중 90개 시군구에 이른다(광역시·도 포함). 또한 84개 시군구에 1인 가구 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191여 개 시군구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1> 지자체별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 및 정책현황

광역시도	1인 가구 지원조례	고독사 예방조례	1인 가구 지원 계획마련	1인 가구 전담팀
서울특별시	○	○	○	○
부산광역시	○	○	○	X
대구광역시	X	○	X	X
인천광역시	○	○	X	X
광주광역시	○	○	○	X
대전광역시	○	○	○(시행계획)	X
울산광역시	X	○	X	X
세종특별자치시	○	○	○	X
경기도	○	○	○	X
강원특별자치도	○	○	X(수립 중)	X
충청북도	X	○	X	X
충청남도	○	○	○	X
전라북도	○	○	X	X
전라남도	○	○	X(수립 중)	X
경상북도	○	○	X	X
경상남도	○	○	X	X
제주특별자치도	○	○	X	X

참고: 2024년 2월 기준 전국 시도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국민통합위원회, 2024)

1인 가구 지원의 지자체 의존도가 높다보니 지자체 예산, 조례 유무, 지역의 1인 가구 비율, 지자체 장의 1인 가구 지원 관심도 등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발생한다. 시도별 1인 가구 지원사업 시행현황(2024년 2월 기준)을 보면 지역별 평균적으로 15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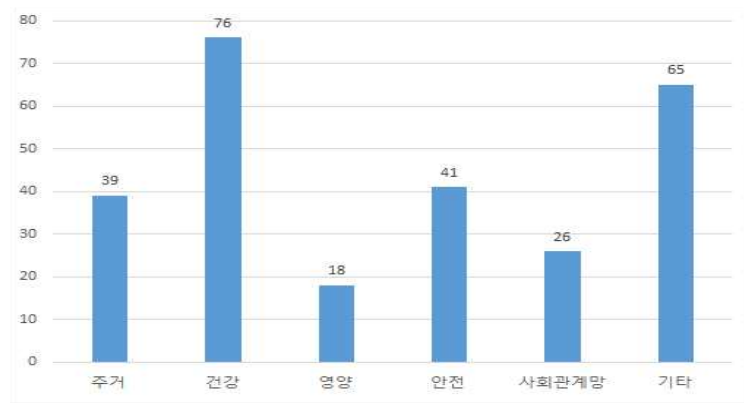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지자체별 정보공개청구결과 1인 가구 시행사업 수(국민통합위원회, 2024)

2024년 2월 기준 국내에서 시행되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주제별로 구분한 국민통합위원회 정책보고서(2024)에 따르면 주거, 건강, 영양, 안전, 사회관계망, 기타의 6개 주제 중 건강 영역의 사업이 76개로 가장 많고 안전 41개, 주거 39개, 사회관계망 26개, 영양 18개 순으로 나타난다. 주제별 대표 사업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주제별 1인 가구의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고, 사회관계망 연결지원과 같은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인력이나 경제적 지원이 수반되는 경우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일정 부분 사용자 부담이 발생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청년, 노인, 장애인,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도 상당수 존재한다. 예컨대 주거나 복지, 안전 등 분야에서 공공임대나 전세자금 지원, 돌봄과 안전

2) 본 통계는 2024년 2월 기준 전국 시군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정리한 것임. 이 중 서울시의 경우는 오랜 기간 1인 가구 실태조사와 사업별 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거치며 만족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사업의 내용과 종류가 정리되면서 사업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관련 지원 등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1인 가구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 중에는 청년 1인 가구의 서비스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존재하지만 연령 기준으로 자격을 나누고 있지는 않다.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청년이기 때문에 받는 지원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의 범위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청년 정책의 경우 중복·비효율 해소와 정책 실효성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해 국무조정실의 주도 아래 범부처 협업구조가 마련되어있다. 이에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등 여러 중앙부처가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기관들도 다수 청년전담인력과 조직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정책대상자인 청년의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한 기반마련을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자리(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택(월세지원, 임대보증금지원), 재정(청년저축계좌제)지원 등이 있는데 많은 부분 예산이 조기소진되거나 신청자가 몰려 조기마감이 될 정도로 정책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서울경제, 2020; 비즈한국, 2024 등). 한편, 1인 가구 정책의 경우 주무부처는 동일하게 여성가족부이나 실제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중앙 차원보다는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지자체별 주무부처도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과 등 다양하다.



[그림 2] 전국 지자체별 정보공개청구결과 주제별 1인 가구 사업수  
(국민통합위원회, 2024)

<표 2> 주제별 대표 1인 가구 지원사업

주제/영역	대표 사업(예시) 1)
안전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배함, CCTV 설치확대, 가로등 설치 확대,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 등
주거	주거급여 지원, *청년주택 공급,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등
건강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마음건강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독사예방사업,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회적 관계망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멘토멘티 프로그램, *공동체활성화, *청년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영양	건강밥상 지원, 반찬 지원, 식생활 개선 요리교육, 취약계층 급식지원사업 등
기타	*일자리지원사업, 법률상담, 1인 가구 정보 포털 구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반려동물 지원,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사업 등

참고: 국민통합위원회(2024), pp. 55-56.

주1) 청년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년 1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 표시

아직까지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해 공공이 ‘왜?’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는 못했으나 홀로 살림을 영위하면서 갖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연구와 조사 결과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청년 전체 평균에 비해 주거, 정신건강, 안전, 영양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전반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자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는 청년 전체 평균 비율에 비해 지하(1.5%), 옥탑방(0.5%), 고시원(1.7%) 등 열악한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청년전체 비율 지하 0.7%, 옥탑방 0.1%, 고시원 0.7%), 노숙, 쪽방, 여관, 일터의 일부 공간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험 또한 3.4%로 전체 청년(1.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청년 1인 가구의 우울증상 유병률의 경우 7.3%로 청년 전체 유병률(6.1%)보다 높고,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3.2%)가 전체(2.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 가구는 요리를 함께 하거나 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 자주 거르기도 하고, 간편식이나 배달음식에 의존하는 등 불균형한 영양섭취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에서 최근 1년 동안

주로 혼자 식사했다는 비율이 청년 1인 가구는 52.1%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청년 전체 비율 20.6%) 청년 1인 가구의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장기적인 건강문제가 나타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하였다(정세정 외, 2022).

통계청 사회조사(2023) 결과는 청년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아니지만 1인 가구가 인간관계에서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15.6%)이나 약간 만족(34.5%)의 비율이 낮고(전체 가구 각각 17.9%, 36.4%), 약간 불만족(6.4%)과 매우 불만족(1.6%)의 비율은 높은 것(전체가구 각각 4.2%, 0.9%)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위급상황의 경우 사회관계망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대해 1인 가구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32.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55.8%),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25.7%)이 모두 전체(각각 26.0%, 49.0%, 20.2%)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3> 1인 가구 지원사업 이용 실태 (단위: %)

구분	인지율1)	이용경험2)	도움정도 평가3)	이용의사4)
1)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일자리	24.4	6.3	66.1	63.9
2)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26.2	5.8	69.6	72.8
3) 1인 가구 안전 도어 서비스	29.0	9.3	67.6	72.9
4)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25.1	7.3	58.7	65.7
5) 생명이음 청진기	18.6	7.6	55.8	58.8
6) AI를 활용한 1인 가구 생활관리 서비스	20.4	8.3	59.3	67.5
7) 자치구별 1인 가구 지원센터	21.6	4.6	60.3	68.2

참고: 김승연 외(2022), p.235

주1) 인지율: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음' 합산 비율

주2) 이용경험: '현재 이용하고 있음' + '이전에 이용한 경험 있음' 합산 비율

주3) 도움정도 평가: 이용하였거나 만약 이용한다면 '약간 도움 됨' + '매우 도움 됨' 합산비율

주4) 이용의사: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 못할 것 같다고 응답한 응답자 제외한 '약간 희망함' + '매우 희망함' 합산 비율

1인 가구가 지원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된 통계자료는 많지 않으나, 최근 서울복지실태조사(2022)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1인 가구 지원사업은 10~20%의 낮은 인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경험 역시 모든 사업에서 10% 이하의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별로 1인 가구의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1인 가구지원센터 이용률은 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이 홍보방식이나 사업의 내용 및 전달방식에 있어서 1인 가구들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1인 가구가 응답 대상이기는 하나, 청년 응답자의 비율이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지원사업 이용실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2) 서비스 미이용에 관한 이론

(1) 서비스 미이용(Non-take-up)이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나 건강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팬데믹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미이용문제는 더욱 부각된 바 있다(Lucas et al., 2021).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복지, 주거,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찰되며,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역사적으로 서비스 미이용, 정책 비수급 등의 주제는 오랜 기간 실증연구의 주제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미이용은 1960년대 들어 영국에서 최초로 소득조사형 급여의 미이용 실태를 조사하면서 부각되었다. 이후, 1990년대 이후에는 유럽의 국가들에서 다양한 복지급여의 미이용 추정치가 산출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정기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Goedemé & Janssen, 2020).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서울시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집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한경훈 외, 2019).

미이용을 개념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수급 사유별 분류'를 소개한다. 초기에 미이용 개념을 정리한 Wim van Oorschot(1995; 1998)은 서비스 미이용 범위에 따라 자격이 있음에도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전체미이용(total non-take-up)과 자격이 있지만, 일부만 수급하는 부분미이용(partial non-take-up)으로 구분하였고, 시간적 관점에서 영구적 미이

용, 일시적 미이용, 마찰적 미이용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후 Warin, P. (2010)은 이를 수정, 발전시켜 서비스 미이용 유형을 접근단계별로 ① 자격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음(Primary Non-take-up), ② 신청했으나 받지 못함(Secondary Non-take-up), ③ (제도상 자격이 박탈되어 접근 불가함(Tertiary Non-take-up)으로 나누었고, 행위주체(개인/행정)의 관점에 따라 비인지(Non-knowledge), 비요청(Non-request), 미수령(Non-receipt), 미제안(Non-proposal) 등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4> 서비스 미이용(Non-take-up) 형태의 유형화

구분	정의 및 설명	대표적 원인/사례
1차 미이용 (Primary Non-take-up)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음	- (의도적) 낙인, 불신 등으로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경우 - (비의도적) 정보, 제도 인식 부족, 신청을 미룸
2차 미이용 (Secondary Non-take-up)	신청절차를 시작했으나 실제로 급여·서비스를 받지 못함	-(수급자행위) 이해어려움, 서류준비곤란, 굴욕감, 침해감 등으로 신청완결못함 -(행정오류) 복잡한절차, 임의판단
3차 미이용 (Tertiary Non-take-up)	자격 요건을 이유로 접근 자체가 차단됨	- 이주민의 체류 자격(ex. 고정된 주소) 부족 - 복잡한 자격 요건 등
미제안 (Non-proposition)	자격이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제도·서비스를 안내·제안하지 않음	- 담당자의 실수 - 제도 홍보 미흡 등

참고: Warin, P. (2010)의 내용을 재구성함.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정책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현상을 크게 3가지 이론에 근거해 설명한다. 첫 번째는 행동경제학, 두 번째는 사회적 자본이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지국가 문턱효과 이론(Threshold Effect)이다.

먼저, **행동경제학**은 전통적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한 정책 미이용 현상을 심리적·인지적 요인과 정책 설계의 영향으로 해석한다. 단순히 비용-편익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실제 인간의 행동 패턴과 인지적 한계, 심리적 요인, 사회적 규범과 맥락이 미이용의 핵심 원인을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지적 부담, 디폴트 효과, 단기주의, 낙인 및 사회적 규범 등이 서비스를 미이용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Baicker et al., 2012; Joost et al., 2017 등).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이론**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상호 규범 등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얻는 자원과 힘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와 협력, 정보의 흐름이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성과(예: 정책 참여, 경제 발전, 공동체 복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사회적 지지와 같은 요소들이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이용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Engbers et al., 2018).

마지막으로 **문턱효과 이론(Threshold Effect)**을 통해 미이용 현상을 조망할 수도 있다. 문턱효과 이론은 어떤 현상이나 행동이 특정 임계점(문턱, threshold)에 도달해야만 뚜렷한 변화나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론으로, van Oorschot(1995; 1998), Kerr(1983) 등의 학자들은 서비스 미이용 행태 및 원인을 정책 이용 결정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문턱(threshold)’을 통과해야 하는 다단계 모델로서 제시하기도 하였다. 요약하면, 정책의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미이용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해당이론을 집대성한 학자로 알려진 van Oorschot(1998)의 이론을 중심으로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문턱 단계(Threshold Stage)에서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근로장려보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점이 정책 미이용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 반면, 미국 위스콘신 주 Medicaid 프로그램에서는 커뮤니티 홍보, 자동 등록, 온라인 접근성이 수급률을 높였던 역사의 기록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정책 인지, 홍보의 중요성을 방증한다(Daigneault, 2023).

두 번째 비용-편익 판단 단계(Trade-off Stage)에서는 자격이 있는 개인이 정책 이용의 이점과 편익을 비교하게 되는데,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이용을 포기(non-demand)하게 된다. 비용은 금전 비용(프로그램 신청에 비용이 드는 경우), 순용 비용(복잡한 신청서, 증빙자료 제출, 방문 필요 등), 그리고 심리적 비용(낙인효과 등)으로 구분된다.

세 번째 신청 단계(Application Stage)는 정책소비자가 프로그램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서류 누락, 데이터 입력 오류, 시스템착오 등으로 자격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생활의 변화(가정폭력, 약물중독, 노숙자 등)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행정부담이나 시간의 지연, 낙인감 등을 이유로 결국 신청자가 스스로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로 서비스를 비수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측면(demand side)이 아니라 정책 제공자(supply side)가 만든 행정적 부담 때문에 미이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관료적 수급 박탈(bureaucratic disentanglement)은 공식적으로 수급자격 있는 사람들이 행정과정에서 정책적 이념적 이유로 수급억제를 당하거나, 복잡한 절차(과도한 서류, 까다로운 신청 양식, 불명확한 자격 기준), 의도적인 지연과 방치(서류 반복 요청 등), 규정의 자의적 해석, 낙인효과 유발 등을 이유로 이용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적 배제(administrative exclusion)도 유사한 개념으로, 정책제공자들이 응답회피, 서류의 반복 요청, 불필요한 면담, 규정 남용을 수행함으로써 인해 정책소비자들의 기회를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예산부족, 업무과중을 이유로 수급대상을 제한하는 교묘하고, 비공식적 축소행 위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적 부담의 경우, 일반계층에 비해 취약계층일수록 더 무력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Herd & Moynihan, 2018). 요컨대, 정책 미이용은 정보 부족, 자격 요건, 행정적 복잡성 등 다양한 문턱에서 발생하며, 각 단계에서 실패하면 정책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 5> 각 이론별 서비스 미이용의 원인

이론	핵심적 원인	내용	
행동경제학 (Joost, V., Ellen, F. & Marleen, B., 2017; Baicker et al., 2012)	인지적 부담(Cognitive Burden)	복잡한 신청 절차, 정보탐색의 어려움, 모호한 안내문, 자격요건의 불명확성 등은 실제로 자격이 있어도 신청을 포기하게 함.	
	디폴트 효과(Default Effect)	정책 신청이 '자동'이 아닌 '신청 기반'으로 설계되면, 행동을 미루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음	
	단기주의 및 자기통제 부족(Short-termism & Self-control)	미래 이익보다 현재의 번거로움을 더 크게 인식해 정책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	
	프레이밍, 낙인(Stigma) 및 사회적 규범	정책 이용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경우, 정책 실효성에 대한 불신, 낙인(stigma), 수치심, 불신, 복잡한 절차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은 실제 금전적 비용보다 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사회적 자본 (Engbers, Trent A. & Rubin, Barry M., 2018)	네트워크의 부재	정책정보 접근성 저하, 신청경험 공유 부족	
	신뢰 결핍	정책의 공정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불신	
	사회적 지지 부족	행동 동기 약화, 심리적 부담 해소 기회 감소	
문턱 효과이론 (Van Oorschot, 1995 등)	수요 자측면	문턱 단계(Threshold Stage)에서의 비인지	정보 습득과 해석에 필요한 학습 비용이 높을수록 미이용률이 높아짐
		비용-편익에 대한 판단 (Trade-off Stage)	혜택(금액, 기간 길수록)이 부실하거나, 비용이 높을 때 미이용하게 됨.
		신청 단계 (Application Stage)의 비수령	행정적 오류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자가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철회(ex.가정폭력, 약물중독, 낙인감 등으로 인한 생활불안정)
	이용 자측면	행정적 부담	관료적 수급 박탈(bureaucratic disentanglement)과 행정적 배제(administrative exclusion)

참고: 선행연구 종합, 연구자가 재구성

본 연구는 서비스 미이용 현상을 행위자 요인, 구조·제도 요인, 그리고 현상 유형이라는 세 가지 분석 차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첫째, 행위자 요인(Demand side)은 행동경제학과 사회적 자본이론을 토대로, 청년 1인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지적 제약, 사회적 규범, 관계망의 영향 등을 설명한다. 둘째, 구조·제도 요인(Supply side)은 문턱효과이론과 행정적 배제 개념을 통해, 정책 설계·운영에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 복잡한 자격 요건, 절차적 부담 등 제도적 장벽을 분석한다. 셋째,

Warin(2010)의 단계별 분류를 차용하여, 청년 1인 가구의 서비스 미이용이 1차(비신청), 2차(미수령), 3차(접근 차단), 미제안 중 어느 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 분석틀은 행위자와 제도, 그리고 미이용의 구체적 형태를 종합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청년 1인 가구의 서비스 미이용 현상을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 (1) Q 표본 구성

이 연구는 1인 가구 청년들의 관련 서비스 미이용과 관련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인식이란 사람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가치, 믿음, 감정, 태도, 신념, 의견, 선호, 관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관성이라고 일컫는다(김홍규, 2003).

먼저, Q 표본 구축을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의견 진술문(opinion statements)의 집합을 수집하였다. ‘의견 집합(concourse)’을 구성하는 목적은 해당 주제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포착하는 데 있다(McKeown & Thomas, 2013).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미이용 관련 문헌과 청년 1인가구 인터뷰라는 두 가지 자료원이 의견집합구성에 사용되었다.

‘청년 1인가구 서비스’, ‘청년 정책 미이용’ 등의 검색 키워드를 활용해, 2016년에서 2025년의 기간 동안 청년 1인 가구 정책 미이용과 관련된 뉴스 기사, 정부·지자체 정책 자료, 학술 논문, 보고서 등 문헌 출처로부터 서비스 이용 및 미이용에 관한 태도, 가치, 의견, 경험담 등을 수집하였고, 선행 질적연구 결과물들로부터도 의미있는 의견진술문을 추출해낼 수 있었다. 새로운 의견이 나오지 않는 데이터 포화(data saturation)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수집을 지속하였다.

두 번째 자료원은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진 인터뷰를 통째서였다. 2024년 1월, 청년몽땅, 청년센터 등에 인터뷰 대상자 모집글을 올려 모집한 12명의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청년서비스 인지도, 만족도, 이용경험과 미이용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사전 연구차원의 대면 및 비대면 FGI를 2차례 수행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서비스에 대한 1인가구의 경험진술의 일부가 Q진술문을 구성하는데 포함되었다. 사전연구에 참여했던 12명 중 1명을 제외한 인원은 본 연구의 P표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두 자료원을 통해, 귀납적 방법으로 유의미한 144개의 진술문이 수집되었다. 144개의 진술문은 엑셀 문서로 관리하여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 편집 및 수정 기록을 추적했다. 최종적으로 144개의 진술문 중 의미가 중복되거나, 두가지 이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되거나, 의미가 불확실한 내용들을 삭제하여 36개의 Q표본으로 축소할 수 있었다. 선정된 의견 진술문이 의견 집합(concourse)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khtar-Danesh 등(2008)이 제안했던 방법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Q방법론 전문가 1명이, 축소된 144개 진술문과 함께 예비 36개 Q-표본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Q방법론 전문가는 Q-표본 진술문 구성에 관한 조언과 함께,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는 불확실한 진술문을 삭제하기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최종 34개의 진술문을 확정할 수 있었다.

<표 6> Q 진술문

연번	Q 진술문
1	프로그램이 다 비슷하고 특별할게 없어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든다.
2	실적을 채우려는 듯한 느낌이지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해 지원해주는 데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다.
3	1인 가구를 지원한다는 점 자체를 생각지도 못했다.
4	주변에 혼자 사는 게 알려지면 범죄 타겟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든다.
5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책전달체계가 불만스럽다.
6	지역사회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7	혼자 사는 게 알려지면 남들이 흠이 있나 문제가 있나 등등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다.
8	정책을 이용하고 싶지만 채널이나 창구가 없다.
9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용해본 적도 없다.
10	MZ들은 주로 sns를 활용하는데 주민센터 현수막과 같은 방식은 너무 올드하다.
11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 실거주지와 등록지가 다른 사람들(직장인, 대학생, 주말부부)은 이용할 수가 없다
12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
13	1인 가구 지원은 지자체마다 예산이나 인력 등 차이가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14	현재 1인 가구 정책은 근본적인 것(주거 등)은 개선하지 않는 단편적 개선을 사실 삶의 질 개선에 있어 큰 의미가 없다.
15	1인 가구인 걸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서 굳이 혼자 사는 걸 밝히고 싶지는 않다
16	1인 가구 지원 자격을 보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는 항상 소득구간에서 제외되다 보니 이용하지 못한다.
17	1인 가구의 불편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당한가 싶어서(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신청할 생각을 못했다.
18	청년 세대를 위한 1인 가구 정책은 노인 1인 가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될 만한 게 없다.
19	혼자 고립된 청년들은 대부분 스스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립된 사람들은 먼저 찾아가서 끌어내주어야 한다.
20	1인 가구가 도움이 필요한 밤 시간(9-6시 제외한 퇴근 이후의 시간) 등의 상황에는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다
21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 이용이 힘들다.
22	1인 가구가 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23	혼자사는 사람 지원해주면 결혼안하고 계속 혼자 살 것 같다.
24	오히려 1인 가구에겐 패널티를 줘서 빨리 1인 가구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25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봤는데 다른 목적(결혼이나 데이트 상대를 찾으려는 노총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불편했다.
26	남자들의 경우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면, 더 분위기가 우울하고 어색할 것 같다.
27	프로그램 담당자가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현황 등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불편하다.
28	1인 가구 담당자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29	1인 가구 지원에 대해 알고 있지만, 나에게 유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용하지 않았다.
30	1인 가구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 내용과 대상이 자주 바뀌어 막상 신청하고 싶을 때 이용하지 못했다.
31	1인 가구 지원정책 용어가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
32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신청하고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
33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주말이나 밤 시간 등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34	1인 가구가 겪는 긴급 혹은 위기상황에 상담이나 지원을 해줄 만한 곳이 없다.

## (2) P 표본 구성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서비스 미이용에 대한 인식유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령·성별·소득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을 적용하였다. Q-방법론은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다양한 인식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 구성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이질성을 확보함으로써, 참여자 간 인식 차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서 1년 이상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을 중심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서울-경기권은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생활 및 경제권이 유사해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고 연구집중도를 높이는데 적합한 지역이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각 지방자치단체(서울 및 경기) 조례 기준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정하였으며, 성비의 경우 여성 참여자 비중을 조금 높여 모집을 했다. 서울시 청년통계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내 성별 구성비율은 여성이 54.45%, 남성이 45.55%로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노컷뉴스, 2025).

## (3) Q 분류 실시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관악구, 서초구 등의 스터디카페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했다. 참석한 청년 참여자들의 수가 평균 5~6명이었던 각 워크숍은 3명의 연구진과 함께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초반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에 대한 동의와 함께 Q

분류법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고, 이후 Q분류를 실시했다. 34개의 진술문 항목과 일련번호가 함께 적힌 카드 1세트와 피라미드형의 Q분류 배치표([그림 3] 참조)를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진술문 카드를 한 장씩 보며 자신의 생각과 일치 정도에 따라 진술문 카드를 분류하였다. 1차적으로는 긍정카드와 부정카드로 분류하였고, 이후에는 분류된 카드에 순서를 부여하며 조사표에 강제할당방식으로 각 카드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조사표는 분류를 위해 가장 반대 -4에서 가장 동의 +4까지 9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각 참여자는 34개의 카드를 보며 자신의 생각과 일치 정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조사표에 진술문 항목의 카드를 배치하였다. 참여자들에게 34개 카드를 부정, 중립, 긍정의 세 그룹으로 나눈 후에 그룹별로 각각 동의와 반대 정도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별 Q 분류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Q분류 이후에는 소감을 나누며, 가장 동의했던 내용과 가장 비동의하는 내용에 기반한 서비스 미이용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4) 분석결과

##### (1) 유형분석결과

분석결과 P 표본 35명을 주성분요인분석(PCA)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변량극대화 방법(Varimax)을 통해 네 가지 유형을 추출하였다. 세 유형의 요인설명량은 <표 7>의 요인분석표와 같다. 유형 1의 설명량은 15%이며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은 5명, 유형 2의 설명량은 18%로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은 8명, 유형 3의 요인설명량은 14%이며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은 7명, 유형 4의 요인설명량은 11%이며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은 3명으로 나타났다. 네 유형의 누적 설명량은 58%로 나타나고 있는데, 총 변량이 25% 이상이면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Q 방법은 유형에 포함된 참여자의 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각 요인에 포함된 참여자는 하나의 의견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김순은, 2016).

<표 7>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ID	성별(연령대)	월평균 소득	1인 가구로 지낸기간	서비스 이용경험	유형별 계수
제1유형 (n=6)	8	여성(30대)	300만원	2년 9개월	무	0.6590
	11	남성(30대)	200만원	4년	무	0.5859
	12	남성(30대)	400만원	6년	무	0.6159
	22	남성(30대)	300만원	3년	무	0.7943
	29	남성(30대)	200만원	10년 4개월	무	0.7177
	5(-)	남성(30대)	200만원	1년 3개월	무	-0.5900
제2유형 (n=10)	1	남성(30대)	-	10년	유	0.7922
	2	남성(30대)	-	1년 4개월	유	0.6277
	4	남성(30대)	-	12년	유	0.8296
	7	여성(20대)	-	5년	유	0.6540
	16	여성(20대)	-	3년	유	0.8966
	19	여성(30대)	-	15년	유	0.6076
	23	남성(30대)	-	5년	유	0.7219
	24	여성(20대)	380만원	2년 4개월	유	0.4712
	25	남성(30대)	320만원	9년 8개월	유	0.5743
	33	여성(30대)	-	3년	유	0.5304
제3유형 (n=7)	13	여성(30대)	230만원	2년	무	0.6208
	14	여성(30대)	140만원	8년	무	0.5352
	21	여성(30대)	250만원	5년	무	0.6950
	27	여성(30대)	200만원	14년	무	0.6638
	28	여성(30대)	200만원	9년	무	0.6142
	34	여성(20대)	400만원	3년	무	0.7799
제4유형 (n=4)	35	여성(20대)	400만원	3년	무	0.6275
	3	여성(30대)	300만원	6년 5개월	무	0.5361
	6	남성(30대)	400만원	10년 4개월	무	0.5449
	20	여성(30대)	280만원	2년 7개월	무	0.7713
	18(-)	남성(30대)	250만원	10년	무	-0.5936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 (n=8)	9	여성(20대)	260만원	2년	무	-
	10	여성(20대)	-	1년 3개월	무	-
	15	여성(30대)	-	5년	무	-
	17	여성(30대)	250만원	5년	무	-
	26	여성(30대)	500만원	7년	무	-

	30	여성(30대)	200만원	6년	무	-
	31	여성(20대)	220만원	2년 2개월	무	-
	32	남성(20대)	-	2년 6개월	무	-

주: Q 분류에서 유형은 계수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분류됨. ID 뒤에 (-) 표시가 된 유형은 해당 유형에 포함되나 절대값이 -인, 즉 절대값이 +인 나머지 표본과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표본으로, 표에는 포함하였으나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음

<표 8> 진술문의 요인가

Q 진술문 (34)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1) 프로그램이 다 비슷하고 특별할게 없어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든다.	0.77	0.00	0.75	-0.77
(2) 실적을 채우려는 듯한 느낌이지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해 지원해주는 데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다.	0.28	0.32	0.25	-0.77
(3) 1인 가구를 지원한다는 점 자체를 생각지도 못했다.	1.64	-1.04	1.15	0.1
(4) 주변에 혼자 사는 게 알려지면 범죄 타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든다	-2.34	-0.09	1.55	-0.96
(5)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책전달체계가 불만스럽다.	-1.12	-0.7	-0.1	-1.5
(6) 지역사회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0.27	0.94	0.9	0.01
(7) 혼자 사는 게 알려지면 남들이 흠이 있나 문제가 있나 등등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다	-2.36	-0.74	-1.03	-1.07
(8) 정책을 이용하고 싶지만 채널이나 창구가 없다.	0.9	-0.71	0.89	0.69
(9)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용해본 적도 없다	1.91	-1.52	1.49	2.39
(10) MZ들은 주로 sns를 활용하는데 주민센터 현수막과 같은 방식은 너무 올드하다.	1.26	0.13	0.99	-0.03
(11)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 실거주자와 등록지가 다른 사람들(직장인, 대학생, 주말부부)은 이용할 수가 없다	-0.24	0.35	0.53	0.29
(12)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	0.37	0.4	0.45	2.03
(13) 1인 가구 지원은 지자체마다 예산이나 인력 등 차이가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0.94	1.44	0.2	0.21
(14) 현재 1인 가구 정책은 근본적인 것(주거 등)은 개선하지 않는 단편적 개선을 사실 삶의 질 개선에 있어 큰 의미가 없다.	0.57	1.06	-0.2	-0.6
(15) 1인 가구인 걸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서 굳이 혼자 사는 걸 밝히고 싶지는 않다	-0.99	-0.82	-0.15	0.91
(16) 1인 가구 지원 자격을 보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는 항상 소득구간에서 제외되다 보니 이용하지 못한다.	0.37	-0.14	0.85	0.74
(17) 1인 가구의 불편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당할까 싶어서(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신청할 생각을 못했다.	-1.39	-1.47	-0.94	-1.17
(18) 청년 세대를 위한 1인 가구 정책은 노인 1인 가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될 만한 게 없다.	-0.1	0.23	0.12	-0.52
(19) 혼자 고립된 청년들은 대부분 스스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립된 사람들은 먼저 찾아가서 끌어내주어야 한다.	-0.65	0.51	-0.11	1.65
(20) 1인 가구가 도움이 필요한 밤 시간(9-6시 제외된 퇴근 이후의 시간) 등의 상황에는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다	-0.47	1.62	-0.2	0.69
(21)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 이용이 힘들다.	-0.41	0.1	-0.32	-0.11
(22) 1인 가구가 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0.24	-1.48	-1.64	-0.69
(23) 혼자사는 사람 지원해주면 결혼안하고 계속 혼자 살 것 같다.	0	-1.07	-1.98	-0.13
(24) 오히려 1인 가구에겐 패널티를 줘서 빨리 1인 가구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1.01	-1.97	-2.22	-2.31
(25)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봤는데 다른 목적(결혼이나 데이트 상대를 찾으려는 노총각)으로	-0.95	0.04	-1.57	0.62

오는 사람들이 있어 불편했다.				
(26) 남자들의 경우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면, 더 분위기가 우울하고 어색할 것 같다.	-0.52	-0.39	-1.26	-0.9
(27) 프로그램 담당자가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현황 등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불편하다.	-0.49	0.03	-0.91	-0.39
(28) 1인 가구 담당자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1.32	1.60	0.66	-0.04
(29) 1인 가구 지원에 대해 알고 있지만, 나에게 유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용하지 않았다.	0.31	-0.83	-0.68	0.38
(30) 1인 가구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 내용과 대상이 자주 바뀌어 막상 신청하고 싶을 때 이용하지 못했다.	0.21	0.72	-0.41	0.34
(31) 1인 가구 지원정책 용어가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	0.46	-0.59	0.04	0.58
(32)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신청하고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	0.46	0.65	0.87	1.41
(33)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주말이나 밤 시간 등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1.01	1.82	1.14	-0.30
(34) 1인 가구가 겪는 긴급 혹은 위기상황에 상담이나 지원을 해줄 만한 곳이 없다.	0.28	1.59	0.92	-0.77

주: Z-score가 절대값 1 이상인 항목은 음영으로 표시함

## (2) 분석결과

### ① 제1유형: 문턱에 다다르지 못한 청년, 서비스 접근 취약집단

이 유형은 1인 가구 서비스 인식과 리터러시가 전반적으로 낮은 집단이다.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용해본 적도 없다”(진술문 9)에 높은 동의를 나타내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집단은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는 세 집단(1, 3, 4유형) 중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이러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들의 서비스 접근성과 정보 획득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이용하고 싶지만 채널이나 창구가 없다”(진술문 8)고 응답하는 등, 제도적 접근 경로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정보적 문턱이 주요 장애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정책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며, 실제로 참여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서비스의 운영 방식과 담당자의 역량에 대한 불만족과 불신을 공유한다. “1인 가구 담당자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진술문 28)에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MZ들은 주로 SNS를 활용하는데 주민센터 현수막과 같은 방식은 너무 올드하다”(진술문 10)에도 공감해, 현재의 홍보 방식이 본인의 생활패턴과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주말이나 밤 시간 등에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진술문 33)에도 동의해, 시간과 방식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이 유형은 낙인감이나 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아, “주변에 혼자 사는 게 알려지면 범죄 타깃이 될 것 같다”(진술문 4)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책선별체계가 불만스럽다”(진술문 5)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 중 다수가 남성인 점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제1유형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정보 부족과 낮은 리터러시, 행정 시스템과 생활방식의 부조화로 인해 서비스 문턱에도 다다르지 못한 채 좌절된 집단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접근 채널의 다양화뿐 아니라, 정책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교육·안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참여 방식 개선이 요구된다.

<표 9> 유형 1 : 문턱에 다다르지 못한 청년, 서비스 접근 취약집단

번호	문장 동의	Z값
9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용해본 적도 없다	1.91
10	1인 가구를 지원한다는 점 자체를 생각지도 못했다.	1.64
28	1인 가구 담당자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1.32
10	MZ들은 주로 sns를 활용하는데 주민센터 현수막과 같은 방식은 너무 올드하다.	1.26
33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주말이나 밤 시간 등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1.01
13	1인 가구 지원은 지자체마다 예산이나 인력 등 차이가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0.94
8	정책을 이용하고 싶지만 채널이나 창구가 없다.	0.90

비동의		
25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봤는데 다른 목적(결혼이나 데이트 상대를 찾으려는 노총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불편했다.	-0.95
15	1인 가구인 걸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서 굳이 혼자 사는 걸 밝히고 싶지는 않다	-0.99
24	오히려 1인 가구에게는 패널티를 줘서 빨리 1인 가구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1.01
5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책전달체계가 불만스럽다.	-1.12
17	1인 가구의 불편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당화가 싫어서(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신청할 생각을 못했다.	-1.39
4	주변에 혼자 사는 게 알려지면 범죄 타겟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든다	-2.34
7	혼자 사는 게 알려지면 남들이 흠이 있나 문제가 있나 등등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다	-2.36

주: 동의/비동의 절대값이 높은 7개의 진술문을 선택함

## ② 제2유형: 서비스 불만족으로 이탈한 청년, 서비스 실효성 요구 집단

제2유형은 1인 가구 서비스에 대해 풍부한 정보와 실질적 이용 경험을 가진 집단으로, 정책 리더십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인 집단이다. 참여자 전원이 이미 한 번 이상 정책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단순히 프로그램과 접촉한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집단이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1(남성, 30대)은 건강검진 사업을, 참여자2(남성, 30대)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이용하며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이들은 서비스의 목적과 효과뿐 아니라 행정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의 한계까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집단이었다. 이러한 배경은 이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불만과 개선 요구를 명확하게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제2유형은 서비스 경험 후의 실망감과 회의감이 크게 누적되어 있었다. “1인 가구가 도움이 필요한 밤 시간이나 퇴근 이후 시간에는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진술문 20), “긴급 혹은 위기 상황에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곳이 없다”(진술문 34)에 높은 동의를 나타낸 점에서 볼 수 있듯, 참여자들은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 정책이나 서비스가 현실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으며, 개별 생활패턴이나 특수한 상황·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체감 실익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참여자 7(여성, 20대)은 “프로그램 운영기관들은 늦게까지 문을 열어두지만, 프로그램은 대부분 6~7시에 끝나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종료된다”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유연성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참여자16(여성, 20대)도 안전키트를 이용했으나 “기간이 지나면 회수하는 절차가 번거워서 회수하지 않는 품목만 신청했다”고 답했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상담가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반복해 상담에 대한 열의가 식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참여자19(여성, 30대) 역시 여성가구 안전키트(방법벨)를 받았지만 “같은 키트를 받은 이웃집에서 방법벨 소리가 계속 울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서비스가 생활 맥락에 적절히 맞춰지지 못했으며, 참여자가 기대한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지 못한 사례들을 공통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처럼 정책이 실제 필요와 일상에 유연하게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이 반복적인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서비스 이용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으며,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혼자 사는 사람 지원해주면 결혼 안 하고 계속 혼자 살 것 같다”(진술문 17), “1인 가구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진술문 24) 등의 진술문에는 강하게 비동의하며, 1인 가구 지원은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 권리가 실제 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느끼며, “현재 1인 가구 정책은 주거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단편적 조치에 그친다”(진술문 14)고 평가한다. 참여자 23(남성, 30대)은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으나 “시간이 남는 특정 청년들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는 부족하다”고 지적해, 공정성 문제까지 문제의식에 포함했다.

요컨대 이 유형은 이미 정책을 경험한 소비자로서, 제도의 공정성·실효성·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구체적이고 날카롭다. 서비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한된 시간·형식적 운영·지자체별 편차와 담당자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계속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대한 실망이 강하게 자리한 상태이면서도, 야간·주말 시간대 대응, 긴급상황 지원 강화,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 등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갖고 있었다.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더 참여하고 싶다’는 잠재적 수요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서비스 혁신,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설계와 실질적 편익 제공이 이루어질 때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0> 유형 2: 서비스 불만족으로 이탈한 청년, 서비스 실효성 요구 집단

번호	문장	Z값
	동의	
33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주말이나 밤 시간 등에 프로그램이	1.82

있으면 좋겠다.		
20	1인 가구가 도움이 필요한 밤 시간(9-6시 제외한 퇴근 이후의 시간) 등의 상황에는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다	1.62
28	1인 가구 담당자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1.60
34	1인 가구가 겪는 긴급 혹은 위기상황에 상담이나 지원을 해줄 만한 곳이 없다.	1.59
13	1인 가구 지원은 지자체마다 예산이나 인력 등 차이가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1.44
14	현재 1인 가구 정책은 근본적인 것(주거 등)은 개선하지 않는 단편적 개선을 사실 삶의 질 개선에 있어 큰 의미가 없다.	1.06
6	지역사회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0.94
비동의		
29	1인 가구 지원에 대해 알고 있지만, 나에게 유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용하지 않았다.	-0.83
3	1인 가구를 지원한다는 점 자체를 생각지도 못했다.	-1.04
23	혼자사는 사람 지원해주면 결혼안하고 계속 혼자 살 것 같다.	-1.07
17	1인 가구의 불편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당한가 싶어서(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신청할 생각을 못했다.	-1.47
22	1인 가구가 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1.48
9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용해본 적도 없다	-1.52
24	오히려 1인 가구에게는 패널티를 줘서 빨리 1인 가구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1.97

주: 동의/비동의 절대값이 높은 7개의 진술문을 선택함

### ③ 제3유형: 안전한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 세심한 맞춤형 설계요구 집단

제3유형은 1인 가구 정책을 실제로 이용해본 경험은 없으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절차적 부담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집단이다.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용해본 적도 없다”(진술문 9)에 동의하며, 정책의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접할 기회가 적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동시에 “주변에 혼자 사는 게 알려지면 범퍼 타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진술문 4)에 강한 공감을 나타내, 안전에 대한 불안이 중요한 문제의식임을 드러내는 집단이다. 참여자 34(여성, 20대)는 “안심귀가를 도와주는 아주머니들이 서 계셔서 집에 늦게 귀가할 때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알려지는 것이 부담되어 ‘죄송합니다’하고 그냥 왔던 것 같다”고 응답하며, 여성의 안전을 지원하는 서비스조차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임이 노출될까 봐 망설이게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1인 가구 서비스 담당자와의 접촉 역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참여자 35(여성, 20대)는 “1인 가구임을 알리는 담당 공무원이 남자라면 부담감이 들어서 포기할 것 같다. 담당자가 여자가 아니라면 조심스러울 것 같다”고 말해, 정책 서비스 이용에서 담당자의 성별이 안전감과 직결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특징은 van Oorschot(1998)이 제시한 비용-편익 판단 단계에서 나타나는 장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즉, 정책 참여자가 정책 이용의 이점과 비용을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위협, 신상 노출에 따른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서구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비용-편익 판단에서의 ‘비용’을 금전 비용, 순응 비용,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Daigneault, 2023),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제3유형은 특히 ‘안전에 대한 비용’이 프로그램 참여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이용을 포기하는 독특한 특징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실제로 2021년 12월, 수원시 권선구 소속의 한 공무원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소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해 결국 살인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즉, 여성 1인 가구가 느끼는 경계심과 불안, 그리고 타인에게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복합적 두려움을 결코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드러낸다(동아일보, 2022). 정보 부족뿐 아니라 이용 과정에서의 안전 불안은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은 1인 가구의 권리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으며, 서비스가 필요에 따른 지원이어야 한다고 믿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1인 가구에게는 패널티를 줘서 빨리 1인 가구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진술문 24)나 “1인 가구의 불편함을 지원해주는 것이 정당한가 싶어서 신청할 생각을 못했다”(진술문 17)에 강하게 비동의해, 처벌적·비편적 시각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34(여성, 20대) 또한 “비자발적 1인 가구도 있는데 패널티는 아닌 것 같다. 개인의 선택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도와주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하며, 1인 가구의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정책이 ‘결핍’이나 ‘문제’의 프레임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요컨대, 제3유형은 정보 부족과 안전 불안이 서비스 미이용의 핵심 요인이며, 지원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한 인식과, 지역 사회의 시선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비노출적이고 세심한 방식의 지원이 결합되어야만 서비스가 실

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제3유형에 포함된 7인은 모두 여성으로, 1인 가구 여성의 안전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뚜렷하게 시사한다.

<표 11> 유형 3: 안전한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 세심한 맞춤형설계 요구집단

번호	문장	z값
동의		
4	주변에 혼자 사는 게 알려지면 범죄 타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든다	1.55
9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용해본 적도 없다	1.49
3	1인 가구를 지원한다는 점 자체를 생각지도 못했다.	1.15
33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주말이나 밤 시간 등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1.14
10	MZ들은 주로 sns를 활용하는데 주민센터 현수막과 같은 방식은 너무 올드하다.	0.99
34	1인 가구가 겪는 긴급 혹은 위기상황에 상담이나 지원을 해줄 만한 곳이 없다.	0.92
6	지역사회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0.90
비동의		
17	1인 가구의 불편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당한가 싶어서(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신청할 생각을 못했다.	-0.94
7	혼자 사는 게 알려지면 남들이 흠이 있나 문제가 있나 등등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다	-1.03
26	남자들의 경우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면, 더 분위기가 우울하고 어색할 것 같다.	-1.26
25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봤는데 다른 목적(결혼이나 데이트 상대를 찾으려는 노총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불편했다.	-1.57
22	1인 가구가 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1.64
23	혼자사는 사람 지원해주면 결혼안하고 계속 혼자 살 것 같다.	-1.98
24	오히려 1인 가구에게는 패널티를 줘서 빨리 1인 가구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2.22

주: 동의/비동의 절대값이 높은 7개의 진술문을 선택함

④ 제4유형: 절차장벽에 의해 U-턴하는 청년, 행정요건 개선 요구 집단

Fuchs 등(2020)이 “높은 문턱(진입 장벽)은 정책 미이용의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라고 언급했듯, 이 유형은 1인 가구 정책의 존재 자체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높은 행정적 허들을 경험하는 참여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이들은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용해본 적도 없다”(진술문 9)는 진술에 공감하며, 정보 부족의 어려움을 강하게 인식한다. 동시에, “정책을 신청하고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진술문 13), “정책을 이용하고 싶지만 채널이나 창구가 없다”(진술문 8)는 진술문에도 동의하여, 정책을 필요로 하면서도 막상 이용하기까지 진입 장벽이 높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 3(34세, 여성)의 인터뷰 자료에서도 드러나는데 “소득구간에 걸릴까봐, 1인 가구라고 하면 저소득층만 될 것 같아서,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응답하여, 자격 제한과 낙인에 대한 우려가 서비스 이용의 장애 요인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인 가구 지원 서비스가 청년 고립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는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 다른 세 집단에서는 동의 정도가 다소 낮았던 진술문인 “혼자 고립된 청년들은 대부분 스스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립된 사람들은 먼저 찾아가서 끌어내주어야 한다”(진술문 19)에 동의하며, 국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책선별체계가 불만스럽다”(진술문 5)나 “주변에 혼자 사는 게 알려지면 법적 타깃이 될 것 같다”(진술문 4)에는 다소 비동의하여, 서비스 이용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게 1인 가구 서비스 미이용은 van Oorschot(1998)이 언급한 수요자 측면(demand side)의 심리적 저항보다는, 정책제공자(supply side) 측면에서 초래하는 행정적 부담, 행정적 기준(소득요건 등)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요컨대, 이 집단은 정보와 절차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특히 소득 구간과 자격 요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는 집단이다. 신청 과정의 복잡성 등의 절차장벽이 서비스 미이용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고립 완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체계적 안내, 기준 완화, 간소화된 행정 절차 등이 마련된다면 향후 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자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 12> 유형 4: 절차장벽에 의해 U-턴하는 청년, 행정요건 개선요구집단

번호	문장	z값
동의		
9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용해본 적도 없다	2.39
12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	2.03
19	혼자 고립된 청년들은 대부분 스스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립된 사람들은 먼저 찾아가서 끌어내주어야 한다.	1.65
32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신청하고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	1.41
15	1인 가구인 걸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서 굳이 혼자 사는 걸 밝히고 싶지는 않다	0.91
16	1인 가구 지원 자격을 보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는 항상 소득구간에서 제외되다 보니 이용하지 못한다.	0.74
8	정책을 이용하고 싶지만 채널이나 창구가 없다.	0.69
비동의		
2	실적을 채우려는 듯한 느낌이지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해 지원해주는 데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다.	-0.77
26	남자들의 경우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면, 더 분위기가 우울하고 어색할 것 같다.	-0.90
4	주변에 혼자 사는 게 알려지면 범죄 타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든다	-0.96
7	혼자 사는 게 알려지면 남들이 흠이 있나 문제가 있나 등등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다	-1.07
17	1인 가구의 불편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당화가 싫어서(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신청할 생각을 못했다.	-1.17
5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책전달체계가 불만스럽다.	-1.50
24	오히려 1인 가구에게는 패널티를 줘서 빨리 1인 가구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2.31

주: 동의/비동의 절대값이 높은 7개의 진술문을 선택함

### 3. 결론

본 연구는 누구나 생애 한 번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에 전체 1인 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홀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 노출되는 어려움들을 잘 다루고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 1인 가구 서비스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1인 가구는 이제 우리 사회 가구 형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요 가구형태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1인 가구가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에 대해 지원하고, 기존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다인 가구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기존 제도적 지원에서 부당하게 배제되거나, 행정적 절차와 접근 방식이 1인 가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해 제도적 지원 체계에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원 자격이 있음에도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동 안전장치로서의 정책 기능이 약화되고, 빈곤 및 불평등 완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저해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이용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투자 감소, 예방적 건강관리의 미이용 등으로 오히려 재정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비스 미이용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간 지원 수준의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추가적인 불공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청년 1인 가구의 정책인식이 어떠하며, 이들이 정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Q 방법론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수의 유형에서 일관되게 높은 중요도가 부여된 인식을 확인할 결과 상당수 참여자들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며, 생활패턴을 고려한 유연한 서비스 제공,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요인가를 보인 영역은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시선이나 낙인에 대한 우려,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 1인 가구에 대한 제재 필요성 등에 관한 진술로, 이는 청년 1인 가구가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정책 권리의식을 보여주는 이러한 결과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설계 대상을 묻는 복지 실태조사 문항에서 소득, 성별, 세대에 따른 취약집단만이 아닌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20대의 경우 24.6%로 다른 연령대(30대 8.4%, 40대 9.3%, 50대 11.9%, 60대 8.5%, 70대 이상 10.6%)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결과가 나타난 것과 같은 맥

락이다.

다음으로, 유형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유형(문턱에 다다르지 못한 청년, 서비스 접근 취약집단)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리터러시가 전반적으로 낮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적절한 홍보 방식으로 인해 물리적·심리적 문턱에서 좌절하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정책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참여 채널과 정보의 부재, 행정 시스템의 경직성이 주요 장애로 작용하며,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과 홍보 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드러났다. 청년 1인가구 서비스의 경우 홍보 채널이 제한적이고 이동이 잦은 1인 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대상자 파악이나 모집이 어렵고, 실적 달성이나 예산 소진 등 상위 정책 목표에 맞춰 서비스가 기획되다 보니 실제 수요와 정책 목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송혜림 외, 2019),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정책 접근성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된다. 정보 전달 경로가 제한적이고, 생활패턴이나 주거 이동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설계로 인해 잠재적 이용자들은 문턱에 다다르지 못하며, 특히, 제도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절차와 채널이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있거나, 담당자의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제도의 문턱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적·운영상의 한계가 결합되어, 서비스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접근 가능한 기회가 제한되는 유명무실한 서비스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제2유형(서비스 불만족 후 이탈한 청년, 서비스 실효성 요구 집단)은 풍부한 서비스 이용 경험과 높은 리터러시를 갖추었으나, 실제 참여 과정에서 반복적인 실망과 회의를 경험한 집단이었다. 이들은 서비스가 필요한 순간에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프로그램 운영의 시간적·실질적 유연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청년들이 정보 접근성의 한계, 복잡한 행정절차, 개인정보 노출 우려, 금전·시간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제도 이용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일관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김성아, 2023; 양준영, 2022; 안현찬 등, 2022; 채병주·황선재, 2021), 이러한 제약이 실제 서비스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저하시켜 정책 실효성을 약화할 수 있다.

제3유형(안전한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 세심한 맞춤형 설계 요구 집단)은 서비스 이용 경험은 없지만, 특히 안전에 대한 높은 욕구와 정보 부족을 동시에 인식하는 집단으로, 여성 1인 가구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정책 참여 과정에서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와 담당자 성별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불안은 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편견과 맞물려 제도 이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정순화·임은정, 2014),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채병주·황선재, 2021; 임주원·김서현, 2023). 특히 성별을 비롯한 개인적 특성의 차이가 서비스 이용 여부와 방식, 그리고 만족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절차장벽에 의해 U-턴하는 청년, 행정요건 개선 요구 집단)은 서비스에 대한 인지와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증빙서류와 까다로운 절차, 불명확한 자격 기준으로 인해 실제 이용에 이르지 못하는 특징을 보였다.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 탐색과 절차 이해의 부담이 커서, 자격이 있더라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인지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상황으로, 제도가 신청자 주도만으로 운영될 때 나타나는 ‘디폴트 효과’의 한계를 보여준다(Baicker et al., 2012; Joost et al., 2017). 신청 시점을 놓치거나 준비가 미흡하면 기회를 상실하고, 행정 과정에서의 오류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은 수급권을 잃게 만들거나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문턱효과 이론’이 설명하는 신청 단계의 비수령 현상이나 행정적 배제의 전형적인 모습과도 연결된다(Van Oorschot, 1995). 이들이 실제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절차를 단순화하고 서류 요건을 완화하며, 필요 시 사전 안내와 같은 지원 장치를 도입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네 가지 유형은 Warin(2010)의 서비스 미이용 유형 이론과 부분적으로 부합하면서도, 한국 청년 1인 가구 서비스 미이용에서 새롭게 나타난 특성을 포함한다. 이를 <표 13>으로 제시하였다. 제1유형(문턱에 다다르지 못한 청년)은 정보 부족, 홍보 채널 부재, 행정 시스템의 경직성 등으로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1차 미이용’에 해당하며, 제4유형(절차장벽에 의해 U-턴하는 청년)은 신청 과정에서의 복잡한 증빙서류,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 행정 오류 등으로 실제 이용에 이르지 못하는 ‘2차 미이용’에 해당한다. 반면, 제2유형(서비스 불만족으로 이탈한 청년)은 이용 경험이 있음에도 반복된 실망과 낮은 정책 실효성으로 인해 재참여를 기피하는 ‘경험 후 이탈형’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3유형(안전한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은 안전 욕구와 사생활 보호 우려, 사회적 편견에 대한 민감성이 미이용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한국의 청년 1인 가구 맥락에서 새롭게 확인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 미이용을 행위자 요인이나 수요·제도 요인 단독으로만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양자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 청년 1인가구 서비스 미이용 유형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유형	서비스 미이용 유형 이론과의 비교(Warin, 2010)	주요 특성
제1유형: 문턱에 다다르지 못한	1차 미이용 (Primary Non-take-up)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홍보 채널 부재,

청년, 서비스 접근 취약집단		행정 시스템 경직성 등으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음
제4유형: 절차장벽에 의해 U-턴하는 청년, 행정요건 개선 요구 집단	2차 미이용 (Secondary Non-take-up)	신청 절차 중 증명서류·자격 기준 불명확·행정 오류 등으로 실제 이용에 이르지 못함
제2유형: 서비스 불만족 후 이탈한 청년, 서비스 실효성 요구 집단	신규 유형 - 경험 후 이탈	이용 경험은 있으나 반복적 실망·정책 실효성 부족으로 재참여 기피
제3유형: 안전한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 세심한 맞춤형 설계 요구 집단	신규 유형 - 안전과 사생활에 대한 우려로 미이용	정책 미이용의 주된 이유가 안전 욕구와 사생활 보호 우려, 사회적 편견에 대한 민감성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1인 가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설계를 넘어, 새로운 관점으로 수요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대한 신뢰, 정보 접근성, 정책 리더러시와 같은 사회심리적 변수, 행동인 지적 변수, 맥락/환경적 변수들 역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일한 여성 1인 가구여도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세심하게 설계되지 못한 현존 서비스를 수용하기 힘들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이더라도, 개인이 지닌 네트워크의 크기나 맥락에 따라 정보 접근의 비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비용이 높을수록 서비스를 회피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는 기존의 보편적 대상화 전략이 오히려 청년들의 실제 삶의 모습과 동떨어져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Hasanović 등(2024)은 유럽 12개국 청년연구를 수행하며, 단순히 나이·성별 등 전통적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따라 청년을 분류하지 않고, 보다 정교한 심리·문화적 지표를 활용해 6개의 청년 세그먼트를 도출한 바 있다. 연구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소득, 교육수준 등)보다 정치 및 사회적 태도, 제도에 대한 신뢰, 문화적 정체성 등의 요소가 청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더 예측력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새로운 관점으로 청년 1인가구 수요층(demand side)을 세분화해 각기 다른 동기과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맞춤형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방식, 제도 설계 역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인 가구 정책의 미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공급과정 단계별로 문턱을 낮추고 전문적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Van Oorschot(1998)의 문턱효과 이론이 말하듯, 정책의 각 문턱은 높을수록 미이용을 심화시킨다. 먼저, 정책의 첫 문을 열어주려면 “그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홍보는 부가 활동이 아니라 정책 생존율을 결정하는 첫 번째 판단이다. 다음 단계인 접근에서 비용을 낮추고 편익을 높이려는 개선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혼자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취약한 사람에게 소득·자산(자격)을 끝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구조는, 지원이 아니라 거절에 가깝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대기 시간은 ‘지금 이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포기하겠다’는 즉시성 편향(present bias)을 부추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정부 기반의 자동 등록(automaticity), 대상 맞춤형 정보 푸시, 지역 밀착형 상담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신청단계에서의 문턱도 낮출 필요가 있다. 정책의 문턱을 낮추는 방식은 이미 많은 정책실험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일례로, 모든 아동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했을 때 저소득층 아동의 이용률이 자연스럽게 함께 증가한 것처럼, 자격규정을 완화하면 낙인(stigma)이 줄고, 참여율이 오른다. 절차 간소화와 자격 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는 접근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전략이다.

특히, 정책편익을 높이기 위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부터 시간·공간 제약, 긴급 상황 대응, 생활밀착형 편익 제공과 같은 현실 변수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 설계 전문성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며, 초기 인지 단계에서부터 운영·사후관리 단계까지 전 주기적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정책 근거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지원은 더 이상 ‘할 수도 있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필수 과제다. 1인 가구 증가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마저 빗나갈 정도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과거 확대가족·4인 핵가족 중심으로 짜여진 제도 틀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가구원 수 감소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확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환’이며, 공공이 1인 가구의 어려움에 어떻게, 어디까지, 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중앙과 지방이 지원의 정당성과 범위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담당자 잦은 교체, 비전문성, 행정 편의 위주의 설계, 주거·일자리 같은 구조적 지원 부재, 단발성 프로그램 남발-가 반복될 것이다. 반대로 ‘홀로 살아가는 삶’을 사회의 정상적 흐름으로 인정하고, 1인 가구가 낙인과 편견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한다면, 이용률은 높아지고 정책 효율성은 배가될 것이다. 이를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등 현행 법제를 전면 재검토·개정해, 1인 가구 지원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대다수의 참여자가 서울과 경기 지역 거주자들로, 해당 지역에 1인 가구 지원 서비스가 상

대적으로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인식과 이용 경험에 지역적 편향이 내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남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는 사회·경제적 조건, 생활양식, 정책 수요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다룸으로써 성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서비스 미이용 현상의 유형별 비율이 왜곡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미이용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 인구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정교하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생활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대 연구참여자들을 배려해 의도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 심층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일부 배제함으로써 분석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참여자(8명)들의 구체적 특성과 유형 미포함 사유에 대한 심층적 해석은 수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산업 전 분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구성원임을 전제로, 이들이 다인 가구와 동등하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 지원정책이 확대해 왔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청년세대로 갈수록 공공의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정당성에 강하게 동의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1인 가구가 가진 권리의식을 가지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혼자 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청년이 결혼하지 않고 1인 가구를 지속하는 것은 저출생의 원인으로 작용해 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편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1인 가구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소규모의 예산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이 대다수를 이루는 한계를 갖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유형별 정책 미이용의 구체적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은 향후 정책의 설계·집행 과정에서 1인 가구 정책 이용률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정책 수급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세영(2019). 이십팔 독립선언. 서울: 상상출판.
- 국민통합위원회(2024). 가족구조 변화와 청년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 국민통합위원회.
- 김성아 · 김문길 · 임덕영 · 노혜진 · 노현주(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순은(2016). Q방법론과 사회과학(개정판). 조명문화사.
- 김승연 · 노승철 · 장익현 · 문진영 · 이영주 · 채황석(2022). 서울복지실태조사. 서울연구원.
- 김홍규(2008). Q-블록과 Q-도구의 일치도 연구. *주관성 연구*, (16), 5-16.
- 송혜림 · 윤소영 · 고선강 · 강은주(2019). 서울지역 자치구 1인 가구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연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안현찬 · 김성아 · 박민진 · 임아름 · 류아현 · 이종선(2022).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서울연구원.
- 양준영(2022) “1인 가구 청년의 사회적 관계현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리포트.
- 임주원 · 김서현(2023). “1인가구 청년의 온오프라인 사회적 관계망과 삶의 만족도의 잠재계층 간 전이관계”. *사회복지연구*, 54(4), 5-41.
- 정순희 · 임은정(2014).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1-19.
- 채병주 · 황선재(2021). “청년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복지영역 선호”. *보건사회연구*. 41(3). 248-268.
- 통계청(2023). 2023년 사회조사.
- 한경훈 · 김윤민 · 허선(2019).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와 특징에 관한 연구: 소득과 재산 분포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5, 205-236.
- Akhtar-Danesh, N., Baumann, A., & Cordingley, L. (2008). Q-methodology in nursing research: A promising method for the study of subjectivity.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0, 759 - 773.
- Baicker, K., Congdon, W. J., & Mullainathan, S. (2012).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ake-up: Lessons from behavioral economics. *Milbank Quarterly*, 90(1), 107 - 134.
- Daigneault, P.-M. (2023). Evaluation of the non-take-up of public services and social benefits. In F. Varone, S. Jacob, & P. Bundi (Eds.), *Handbook of Public Policy Evaluation* (pp. 408 - 424). Edward Elgar.
- Engbers, T. A., & Rubin, B. M. (2018). Theory to practice: Policy recommendations for fostering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ocial capital.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8(4), 567 - 578.
- Fuchs, M., Gasior, K., Premrov, T., Hollan, K., & Scopetta, A. (2020). Falling through the social safety net? Analysing non take up of minimum income benefit and monetary social assistance in Austria.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4(5), 827-843.
- Goedemé, T., & Janssen, J. (2020). *An overview, with a focus on the non-take-up of social benefits*. In GRID-2 Project Deliverable 9.2. Retrieved from <https://www.inclusivegrowth.eu/files/Output/D9.2-Non-take-up.pdf>
- Hasanović, J., Lavrić, M., Adilović, E., & Stanojević, D. (2024, October 21). *Youth study Southeast Europe 2024* [Working paper]. SSRN. Retrieved from <https://ssrn.com/abstract=5013679>
- Herd, P., & Moynihan, D. P. (2018). *Administrative burden: Policymaking by other means*. Russell Sage Foundation.
- Joost, V., Ellen, F., & Marleen, B. (2017). *The value added of behavioral insights for policy instrument mixes to reduce non-take-up*. Paper presented at the 1st IPPA International Workshops on Public Policy.
- Kerr, N. L. (1983). Motivation losses in task-performing groups: A social dilemma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4), 819 - 828.
- Lucas, B., Bonvin, J.-M., & Humbelin, O. (2021). The non-take-up of health and social benefits: What implications for social citizenship?. *Swiss Journal of Sociology*, 47(2), 161 - 180.
- McKeown, B. F., & Thomas, D. B. (2013). *Q methodology* (2nd ed.). Sage.
- Van Oorschot, W. (1995). *Realizing rights*. Avebury.
- Van Oorschot, W. (1998). Failing selectivity: On the extent and causes of non-take-up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n H.-J. Andress (Ed.), *Empirical Poverty Research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p. 101 - 130). Ashgate.
- Warin, P. (2010). *Le non-recours: Définition et typologies*. Odenore: Document de travail.
- Warin, P. (2016). *The non-take-up: Definition and typologies* [Working paper]. Retrieved from <https://hal.science/hal-01419351/>
- 노컷뉴스 서울 청년가구 64%는 1인가구.. 그 의미는?  
[https://news.nate.com/view/20250625n16034?utm\\_source=chatgpt.com](https://news.nate.com/view/20250625n16034?utm_source=chatgpt.com)
- 동아일보. 2022년 1월 10일. 공무원이 2만원에 넘긴 주소, 이석준 살인에 쓰였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10/111182577/1>
- 비즈한국. 2024년 12월 6일. 연말 앞두고 날벼락 '청년월세지원' 끊겼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709>
- 서울경제. 2020년 3월 10일. '청년고용장려금 예산 두달만에 절반소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4S8608H>
- 한겨레. 2023년 11월 28일. 지자체 5곳 중 1곳, 독자적 '1인 가구 정책' 아예 없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17928.html](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17928.html)